

# 원희룡 장관, “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”

- 이틀째 부산 현지에서 비상수송대책 점검 이어가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(목)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으로,
    - 25일(금) 오전 8시에는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,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하였다.
  -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”라고 하며,
    - “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,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  - 아울러, 원 장관은 정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,
    - “정부는 컨테이너·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”라며, “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    - 또한, “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\*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어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,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되었고,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으며,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\*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‘안전운송운임’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‘안전위탁운임’으로 구분됨

- 또한, 원 장관은 “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,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”고 설명하며,
- “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2022.11.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